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5일 (토)
제 25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2.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3. [인터뷰] 유엔 인권소속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최근 이라크에서 '팔루자 학살' 만행에 이어 미·영국군의 포로들에 대한 전기고문과 성폭행, 나체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야만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분명 군대의 '추억' 사진을 찍듯이 고문 피해자들 옆에서 포즈를 취하는 병사들의 모습이었다.

"이라크 인들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 적나라한 지옥의 참상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미군은 원래 잔인하다고 말한다. 미군의 타국 점령의 역사는 학살과 강간, 고문과 같은 끔찍한 반인륜 범죄의 연속이었으므로 그 말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라크에서의 잔혹극은 그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진실인가. 서방의 선진국들이 벌였던 전쟁에서는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없었던가? 이 나라 군대가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잔혹극은 다른 성질의 것이란 말인가? 답은 '미국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전쟁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전쟁은 상대방을 극단의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신의 영토를 배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거기에는 일상적인 인간성보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있기 마련이며, 용서와 포용, 이해보다는 극단적인 적대행위가 정의로 치장되고 살인을 비롯한 온갖 범죄가 전쟁영웅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전쟁이다.

이러한 전쟁을 거부하는 일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다가온다. 마침 오늘은 '세계병역 거부자의 날'이다. "살상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는 세계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칠레를 본거지로 전세계에서 '군인을 집으로!'란 행사를 조직한다. 이미 병역거부는 서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매년 결의안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국제조약의 전 단계에 이를 정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떤가. 이라크의 비극이 전해진 이 마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추가파병 절차를 밟고,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야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전쟁 '살인의 추억' 만들기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을 밝히자. 제발 잔혹극의 추억 만들기에 동참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기사 처음으로>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중학교 1학년인 A양은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에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에 의해 학교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끌려갔다. 12명의 학생들은 말이 없고 내성적인 A양에 대해 '지능저하 장애인'이라고 놀리면서 괴롭혀왔다. 이날 이들은 A양을 위협하며 웃을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나가던 남자 아이들을 불러 "구경하라"고까지 했다. A양은 이 일을 담임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한동안 동교를 못한 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단지 장난이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14일 전교조와 학생생활연구회가 주최한 '따돌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소개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례이다. 소위 '왕따'라고 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폭력, 성추행에 이제는 '사이버'로까지 옮겨가며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 뿐만 아니라 '전따'와 '은따'라는 용어도 생겨났는데 '전교생에게 왕따'라는 의미의 '전따'와 '은밀히 왕따'라는 뜻의 '은따'는 이미 학교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는 것.

'학생간 괴롭힘'이라고 하는 '왕따' 문제는 96년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던 급우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속히 부각되었지만 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는 학생간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이어지는 결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학생생활연구회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의 김혜정 씨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가해학생을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돌림 사건을 대할 때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만, 사건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이분법적인 것보다 구조적인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를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따돌림 현상은 상호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러한 학생간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29일 공포되었고 다가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문석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장은 이 법이 "학교폭력문제의 모순을 여전히 담고 있는 상태"라며, △법률에서의 교육주체의 배제 △징계와 처벌 중심의 법률 △예산의 빈곤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 씨는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복지 시스템의 구축 △생활중심·협동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학생 인권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법률은 어쩔 수 없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방식이 아니라 '어른들'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씨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률의 시행령안에서는 '학교폭력'을 학생과 학생간의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폭력으로서의 학생간 괴롭힘은 전쟁이나 군대 등과 같은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나, 체벌 등으로 드러나는 교사폭력, 가정폭력 등이 근본적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폭력의 구조를 파악하지 않고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심한기 '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관계의 복원'을 제시했다.

<기사 처음으로>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정진성 씨(서울대 사회학 교수)를 포함한 13명을 인권소위원회(아래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정 씨는 2008년까지 4년간 인권소위 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내에서 외교관이 아닌 민간인이 인권소위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 씨가 처음이다. 정 씨를 만나 포부와 인권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들어보았다.

·계획을 밝혀달라

▶인권소위에 가면 무슨 이슈를 잡을지 지금 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인신매매, 불치병, 집단학살 등의 문제를 광주 5.18, 제주 4.3, 중군위안부와 연관지어 관심 가지고 있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인권위보다 인권소위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 인권소위는 어떤 곳이고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면 되는가?

▶인권소위는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와는 달리 각 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들 중 26명의 위원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추천되어 선출되므로 아주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원들은 평창히 독자적인 경유도 많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인권위에서 정부대표를 상대로 로비 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인권소위는 개인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음으로 인권위에 비해 영향은 작을 수 있으나 좀더 쉽다고 본다.

·인권소위는 유엔의 '싱크탱크'로 불리며 새로운 인권규범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범을 해석·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기준이 국내 인권운동에 자극이 되기도 할텐데...

▶인권소위는 연구중심이다. 인권소위 위원들이 이슈를 가져와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겠다고 소위의 다른 위원들에게 짜인을 받아 통과되면 이슈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그 이슈를 정할 때 민간단체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위원 중 한 명이 현재 '형사적법절차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 많다'며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 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기준들이 국내에서 효과 있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유엔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우리는 인권선진국이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전세계 150여 나라 중에서 집단학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들에 비하면 상위에 속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이 있겠는가. 카펫 짜는 아이들이 우리 나라에는 없지만 원조교재, 왕따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조건이지 않는가.

·전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 속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의 위협과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가 문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흐름에 대해 인권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모르겠다. 반테러리즘이 자행하는 인권탄압은 분명 존재한다. 테러가 인권탄압의 평가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대비해서 있는 것인데 북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다. 주적 개념도 아니고, (국보법을) 상당히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정세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은 하돼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비정규직이 너무 악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맥락 속에서 기업이 시장의 위축에 따라 언제든지 쫓아내는 소모품 같은 존재이다. 법적으로 비정규직의 퍼센트를 규제 혹은 제한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시장에 크게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치밀한 연구를 병행해서 비정규직이 이윤을 증대하는데 이용될 뿐이지 '우리 나라 생산성 증가와 성장에 (비정규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계속 제시하며 설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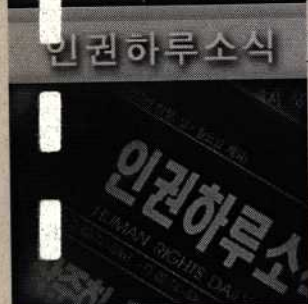
<기사 처음으로>

·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8일 (화)
제 25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 <오늘의 기사 제목>
1.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2.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3.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과 빚더미 위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증가, 주거권 실현을 가로막는 강제철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그대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모든 사안들을 모아 문제제기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800만을 넘는 빈곤층이 벼랑 끝 생존을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인권적인 삶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이종훈 노동국장은 "그동안의 투쟁이 사회화 되지 못한 채 결집되지 못하고 고립 분산되고 흩어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공통된 요구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차별과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5월말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6월 말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보고서 발표와 진정인 총회도 계획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진정인 총회에서 다양한 집단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를 공유하고 그 원인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들을 통해 각 집단들이 다양한 조건에서 나온 공동의 요구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선언 참여는 우편과 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20일 개봉 예정인 toaction.jinbo.net을 참고하면 된다.

<기사 처음으로>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북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풀"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사합의 17부)는 "국가와 전라북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

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재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었던 반면, 개복동 사건에서 창문의 폐쇄나 특수키의 설치를 행정기관의 책임 밖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법적용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서는 "경찰이 쇠창살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책임을 방기했고, 전라북도 또한 소방책임이 있다"며 업주에게 5억9천여 만원, 국가와 전라북도에 6천7백 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김 씨는 "(개복동의 경우)경찰서에서 50미터 거리의 대로에 있는 업소의 상태를 경찰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성매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업주와의 유착이 근절되고 수사체계가 정확이 되는 등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오히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방관하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는 지난 2002년 1월 감금 상태에 있던 성매매 피해여성 14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으로, 유가족이 같은 해 4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기사 처음으로>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을 예고도 없이 통보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 노숙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에 대한 '노숙인 의료구호비'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중단방침의 이유를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이 4월말로 바닥났고, 의료지원을 받는 노숙인 중 중증환자들이 의료구호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과다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으로 인해 이미 많은 노숙인들이 병원으로부터 입원이나 수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장 씨의 경우 췌터에 입소해 생활하다가 4월 20일 교통사고로 다친 발목이 잘못 접합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수술을 위해 5월 4일로 입원일자가 지정되었으나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입원과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 씨의 경우 10분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만성 노숙인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키워 가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시는 시청 앞 잔디광장 조성을 위해 53억 원을 집행했고, 죽은 잔디를 보수하기 위해 1억 7천 만원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Hi-Seoul'축제에는 15억 원을 들였다.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하는 hi-seoul'이라는 노숙인 단체들의 의견이 현재 우리사회 노숙인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 12억 원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치료받아야 할 노숙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서울시에 노숙인은 이미 '시민'이 아니라 보여 주기식 사업에 있어 불편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존재일 뿐이다.

노숙인 수가 1년에 400명 정도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노숙생활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1년에 400명 정도가 행려자로 죽어간 '사망 노숙인'이라고 한다. 서울시 조처에 항의하는 선전전을 마치고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한 노숙인 분이 '어제 김 아무개가 두들겨 맞고 죽었어'라고 담담하게 노숙인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숙인도 인간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명제가 우리에게 철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노숙인의 인권이 '인권'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후안무치함 때문일 것이다. 치료를 받거나 편안한 주거를 누릴 권리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있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은,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우리사회 민민의 한 모습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에 항의하며 노숙인 인권단체들은 '의료구호 중단방침 철회와 근본적인 노숙인 의료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무기한 항의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힘은 미약하다. 하루에 한 명 꼴로 사망하는 노숙인의 '생존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유의선 님은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사무국장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10일 ~ 5월 17일)

1.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반전평화의 촛불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 파병결정 철회 촉구/ 국제적십자위원회, '이라크 전쟁포로 및 동맹군 구금시설 수감자 처우 실태보고서'에서 '수감자들의 70~90%는 무고한 사람들이며, 가혹행위는 체포순간부터 시작됐다'고 밝혀(5.10)/ 여연 등 6개 여성단체, 미군의 전쟁범죄 규탄 및 파병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5.12)/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파병철회 강력히 주장(5.13)/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촛불 한마당 열어... 매주 토요일 파병반대 촛불집회 계속 다짐(5.14)/ 부시, 이라크 주권이양 후에도 '미군이 치안유지 하겠다'고 밝혀(5.15)

2. 권리보장, 인권보호는 언제쯤?

전교조 여성위원회, '전국초중고 여학생의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등학생의 47.8% 중학생의 27% 초등학생의 12.1%가 '생리통이 심하다'고 응답, 90% 넘는 여학생들 '안정적인 휴식을 필요'로 한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 2003년 아동학대긴급신고전화로 통해 접수된 4,983건 가운데 2,921건이 아동학대라고 밝혀(5.11)/ 전교조·학생생활연구회, '따들림 및 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 지적(5.14)

3. 또 다시 마녀사냥 시작하는 국가보안법

경찰, 2002년 한총련 대의원 김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5.10)/ 11기 한총련 간부로 활동한 광증현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5.11)/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 '1주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한마당' 개최/ 서울경찰청 보안2과,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연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선홍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안덕영 씨에게 무죄 선고(5.13)

4. 기타

근로복지공단(대구), 경북대병원 노동자 31명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신청 승인(5.10)/ 국가인권위,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감자 중 30%가 군 수사과정에서 고문, 협박,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 영국 <인디펜던트>, 미군과 영국군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이라크내 어린이 백혈병이 증가했다고 보도(5.12)/ 휴먼라이츠 워치, 아프칸미군 포로학대 사례 보고/ 성매매피해 여성 3명, "성매매업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5.13)/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맞아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5.15)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19일 (수)
제 257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기사 제목>

1.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2. 0교시는 인권침해다
3.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4.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보호감호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즉시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대상자를 강도, 성폭력, 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특정 상습강력사범으로 한정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중처벌 등의 비판을 불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책위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권고에 따른 제반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해온 인권단체들은 "대체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보호법을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을 보면 법무부 역시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 아니냐"면서 "사회보호법은 이미 지난 25년의 경험을 통해 아무런 '사회방위'의 효과가 없는 오로지 '반인권악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을 계승한 대체법률을 제정해 또 다른 이중처벌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 역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결정"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현 사회보호법도 그렇지 않느냐?"며 "지금의 결정은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잠재우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와 출소자,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조건 없는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 학생 1,3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77.5%에 이른다.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자율학습이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길리서치 조사결과는 '0교시로 인해 아침을 간혹 거르거나 못 먹고 오는 학생'이 62.3%이고, '불규칙한 식사, 운동부족으로 건강의 이상을 체감한 학생'이 71.8%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0교시 수업과 강제적인 보충학습이 학생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윤수근 씨는 "보충수업이나 자율 학습에 아이들이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강제로 진행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에 진정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4월 8일과 27일 2차에 걸쳐 '보충·자율학습에 반대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한데 이어 24일부터 파행적 보충, 자율학습에 대해 전면 거부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정을 재미있게 말하는 <먼곳에서부터>와 물을 에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흠뻑지 일으키며 찾아 온 군대를 그린 <최우선권> 등 모두 6편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상영한다. 베트남의 혁명과 전쟁을 실험적인 영상으로 엮은 다큐멘터리도 만날 수 있다. 쿠바 기록영화의 거장 산티아고 알바레즈의 중·단편들이다. 베트남 공화국의 지도자인 호치민의 일대기를 자전적 시와 뉴스릴로 만들어낸 <호치민 79분>, 폭격 속에서도 평상심을 잃지 않는 베트남 민중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노이, 13일의 금요일>이다.

어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 편의 영화도 상영된다. 헝가리 티자강을 삼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은 이웃 금광에서 유출된 청산염으로 인해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유산: 한 어부의 이야기>는 강을 살리기 위해 금광을 상대로 긴 싸움에 시작하는 한 어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죽은 물고기 한 마리>는 캐나다 어부들의 분노를 전하는 작품. 전통적인 손쉬운 방법으로 어업을 이어가던 어부들이 해양정부청사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저인망으로 무장한 거대 수산 자본의 편을 들면서 이들은 바다에서 밀려나게 될 지경이다. 뜻에 올라 고공시위까지 진행하지만 투쟁의 끝은 멀기만 하다.

핵무기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의 괴로움과 가해자의 뻔뻔함을 담은 <히바류사: 세상의 끝>의 감독이 영화제에 참석할 예정. 히로시마 핵폭탄 피해자와 함께 이라크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한 이 작품은 핵의 반인권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는 <난민캠프>, 프랑스가 알제리 전투 당시 저질렀던 군사테러 기술이 남미 군사독재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폭로하는 <죽음의 부대: 프랑스 군사학교> 등도 놓치지 아깝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부대행사로 '감옥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는 감옥은 비약되거나 미화되기 일쑤이며, 감옥에서의 인권침해는 교도관들이 가하는 수용자 '폭력'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감옥 그 자체가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고 출소자들은 말한다. 출소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감옥을 직접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한국 감옥의 현실'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만화가 이동수 씨와 장애인이동권연대 조한나 씨가 함께 진행을 맡았고 449 프로젝트 김병오 씨가 축하공연을 한다.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아나의 아이들> 감독 줄리아노 델 카미스 씨는 현재 이스라엘 보안당국의 불허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기사 처음으로>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는 색션을 만들어서 소외된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상과 호흡하려는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들을 발굴하여 그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상당수의 비디오 활동가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구가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알려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이 이전에 비해 좀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바로 정보통신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

이다. 이에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라는 섹션 아래 '클릭 인권 현장'이라는 부제를 설정하여, 정보통신운동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등장한 비디오 행동주의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자 4개의 섹션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민중투쟁의 현장을 찾아가다'에서는 칸쿤에서의 반세계화 투쟁, 손배 가압류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항거, 강제추방 저지를 위한 이주 노동자들의 싸움 등 작년과 올 상반기 민중 운동 진영의 주요 투쟁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한다. 삶보다 죽음이 가까웠던 절박한 인권 탄압의 현장을 지켰던 카메라의 시선들을 접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02, 발전노조의 싸움을 다시 보다'는 지난 2002년 발전 노조의 산개 파업 당시, 노조원들과 연대하며 산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민영화 지지 미디어 활동단의 성과를 돌아보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02년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를 부르짖으며, 발전노조는 38일간의 산개 투쟁을 벌였다. 사측과 정부의 위협과 회유, 주류 미디어의 거짓 공작이 난무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산개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력 중 하나는, 정보통신운동과 결합된 영상 운동 진영의 공동행동 덕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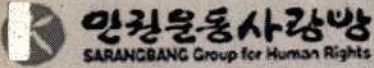
'넙비'를 들먹이며, 시위대의 폭력성을 운운하며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을 왜곡된 방향으로 선동해온 주류 미디어에 맞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어 온 사람들이 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릴 길 없던 부안 주민들은 영상팀을 꾸려, '전북인터넷신문 참소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안의 역동적인 현장을 생생히 담았다. 영상으로 스스로의 투쟁을 표현하려는 이들의 소중한 결실을 '부안 주민들, 카메라를 들다'에서 만날 수 있다.

'비디오 행동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독립미디어센터의 최신 작업도 선을 보인다. <마이애미 모델: FTAA 반대투쟁, The Miami Model>은 지난 11월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FTAA 반대 투쟁의 숨가쁜 현장을 포착한 FTAA 독립미디어센터의 성과물이다. 미주자유무역협정 비디오 워킹 그룹 팀에 의해 제작된 이 작품은 상영이 끝난 후 제작 주체 중의 하나인 사샤 콘스탄자 초크가 참석하여 독립미디어센터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0일 (목)
제 257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뼘
2.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3.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번호인제도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뼘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중에서 일반 조합원이었던 17명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내렸지만, 대의원 이상 간부경력에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태광산업은 흑자를 유지하던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850명에 대해 강제 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노조가 같은 해 6월 12일부터 83일간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하였다. 그 후 노조위원장 등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38명에 대해서만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은 당시 회사가 흑자를 기록해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확인되는 등 불법과업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당시 노조위원장 등 일부 핵심 간부들은 희망퇴직으로 소가 취하되는 등 형평을 고려해,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간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태광산업정리해고투쟁위원회 김형욱 의장은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손해가압류가 지나치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함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민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기본권을 해치는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그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복직투쟁을 하며 생계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가압류까지 가중되면서 가정 파탄을 겪기도 했다. 김형욱 의장은 "해고된 이후에 하루하루 그냥 살아왔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 홈페이지에는 '태광해고자'라는 아이디로 '3년여의 세월동안 가정 이 파탄나고 죽임의 벼랑끝에서 신음하는 해고자들에 대하여 생계를 이어갈 대책을 세워주시는 커녕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자본과 더러운 악법에 대하여 빠른 사무치는 분노를 느낀다'며 울분을 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렵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77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일 12시부터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최저임금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시민선전행사를 진행했다. 주 씨는 "사실 77만원은 말 그대로 쌀만 먹고서 겨우 살아가야 할 금액"이라며 "평균 110만원은 쥐야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데 77만원은 정말로 한계선"이라고 최저임금 쟁취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해 임금이 결정된다.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7,260원인데 이는 160만원으로 추정되는 올해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중간임금의 50% 내외에서 결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현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강용준 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경제학, 경영학 등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계산하는 최저임금은 책상머리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작년 최저임금 56만원으로 한 달만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면 들어줄 용의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강 씨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20만 명으로 파악되는데, 대부분이 시설관리, 청소 용역 등의 여성 노동자"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후 공단이나 저임금 지역 등을 돌며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 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빈곤' 앞에서 작아지는 헌법의 권리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르는 엄청난 수입료를 부담할 수 없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형사 변호인 선임 현황 2002년>

전체 피고인수 : 278,583명(100%)
 사선 : 90,161명(32.4%)
 국선 : 68,334명(24.5%)
 변호인 선임 피고인 수(사선+국선) : 158,459명(56.9%)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회의자료 2004.4)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전체 형사 피고인 중 56.6%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43.1%에 이르는 12만 명이 넘는 형사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율이 96.3%(사개위 자료)인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수치이다. '명쾌한' 헌법의 규정이 무색할 뿐이다.

형사사건에서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장에 수사 와 재판에 임해야 하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하다. 더욱이 우리의 초중고 교육기관 어느 곳에서도 형사소송의 과정과 적법절차를 시험문제 이상으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의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면 형사소송의 절차와 법률적 대응은 너무도 생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변호인을 두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처럼 많은 것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무죄를 다투야 하는 형사재판에서도 가난한 피고인은 자신을 충분히 방어할 수가 없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 필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문을 실시하는 모든 피의자'로 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그 범위를 '구속 피고인'으로 한정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가 구속의 경우보다는 자기방어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는 구속 피고인뿐만 아니라 불구속 피고인도 변호인의 전문법률 지원은 절실하다.

더 나아가 구속 피의자와 불구속 피고인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이전의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체포와 수사 초기부터 조사담당자와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가 구속 피고인에게만 필요적 국선변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취지에 맞지 않다. 구속과 불구속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의자 신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법무부가 형사소송 개정안으로 강조하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에서는 턱없이 미흡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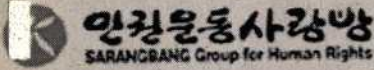
한편, 대법원 사개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란 '특정 변호사로 하여금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다른 민·형사 사건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국선변호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론의 질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범죄를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앞에 둔 '재판'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1일 (금)

제 25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2.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3. 클릭! 인권정보자료 - 「타인의 고통」
4.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는 "국가보안법 존치를 전제로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오·남용되고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되어 인권 침해가 있었지만 순기능을 위대한 채 역기능만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관리와 안보를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를 인정하지만, 필요성이 더 크고 문제점은 보완해 가면 된다는 주장이다. 제 교수는 또 "어느 나라든지 안보를 인권에 종속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 37조는 안보를 위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국가보안법 개정내용으로 "인권 침해가 큰 조항(불고지죄)부터 일부 개정하거나 보완(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죄를 일부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반면 허일태 교수(동아대 법학)는 "안보가 중요하지만, 안보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해 왔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못박았다. 허 교수는 형법적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상 최후의 수단성을 상실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의 중형성과 남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7조 1항의 '찬양·고무', '동조', '구성원', '활동'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어서 자의적 인 해석과 판단을 가능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국가보안법 유지와 폐지를 둘러싼 팽팽한 쟁점들은 좁혀지지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철 변호사는 "정권의 편의를 위해서 과도하게 (인권을) 제약하기는 했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검찰과 법원의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 바로 잡아야지 법, 제도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악용의 소지만 없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어떻게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지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는 "외화하지 않는 사상과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학문·사상의 자유는 연구, 발표, 비판, 반비판의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송 변호사는 또한 북한의 위협과 대남 전략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남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북한을 이유로 남한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을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면 되고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시기 교수(동국대 문화인류학)는 "변화의 시대에서 법이 예술, 문화의 발목을 잡는다면, 지금까지 만든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예술의 상상력을 제약해 문화를 정체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를 청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중순 국

가보안법에 대한 정책건의를 입법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축제로 만나는 반전·평화 운동

'평택에서 만나요' 29~30일 평택 평화 축제

얼마 전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부평, 원주 등지에 있는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택은 3만6천여 명의 미군과 1천만 평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미군기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평택 인구의 10%, 평택 땅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택에 모여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며 한바탕 축제를 연다.

29일 낮 12시부터 평택공설운동장에서는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가 열리고, 30일 오전 9시부터는 미군기지 공여지로 예정되어 있는 안정리와 대추리에서 평화행진과 인간띠잇기가 진행된다. 이번 평화축제는 5.29반전평화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아래 평택대책위), 한국민족공동체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인권사회단체와 수많은 개인들이 만들어간다. 29일 평화콘서트에는 윤도현밴드, 꽃다지 등 가수·노래모임 뿐만 아니라 부안노랑고무신, 이주노동자문화패 등도 참가할 예정이어서 1박2일 동안 '한국의 우드스타'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2월부터 전국을 순회한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은 반미·반전·평화를 노래하며 이번 축제를 알러왔고, 채천간대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지난 9일 부안을 떠나 광주, 노근리를 지나는 평화순례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알려내고 있다.

'총을 내려라'라는 주제아래 평화축제에서는 '이라크 파병 철회'와 '미군기지 평택 집결지'를 이야기한다. '이라크 파병 철회'에 대해 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적으로도 유엔의 결정에 반하는 불법 전쟁이고, 미국의 허구적 민주주의가 파탄난 명분없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에 파병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파병 철회 주장은 당연하다"고 했다.

현 평택 미군기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하던 땅으로 이후 미군이 주둔하며 계속해서 기지를 확장해왔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과 땅을 빼앗기고, 환경오염·소음·미군범죄 등을 통해 고통받아오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봐 변변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 씨는 "미군과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계획에는 여전히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파반수 이상의 평택 주민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는 이 씨는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미군기지가 확장돼선 안된다"며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팔루자 학살,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등을 통해 이라크전쟁의 반인륜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지금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은 평화축제를 통해 추악한 전쟁과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고자 한다. 매항리에서처럼 평택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기대된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통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지은이: 수전 손택/ 옮긴이: 이재원/ 펴낸곳: 이후/ 253쪽/ 2004년 1월

최근 이라크 포로 학대 사진과 미국인 참수 동영상 일부가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퍼져나가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과 '이미지 너머의 진실'에 대한 성찰 없이 잔혹한 사진과 동영상 '소비'하는 태도는 그것이 아무리 미국의 패권주의를 증명하고 반전여론을 고취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전 손택의 이 책은 이와 같이 타인의 고통을 한낱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저자는 어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지, 어떤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 혹은 공개하되 어떠한 제한 요건 하에서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않는다. 다만 사진 속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가장 명확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진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친다.

잔혹한 사진들이 가져다 준 충격은 전쟁에 대한 거부감만을 자극할까? 저자는 반대로 그러한 사진들이 호전성을 부추기는 선전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인간의 야만성' 자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초점을 전쟁의 원인과 정치로부터 인간성의 문제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는다. 또한 사진 속 고통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연민은 무력감(이

런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나 있는 걸까')과 함께 무고함('난 저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까지 증명해주기에 피해자의 고통에 진지하게 개입하기보다 '타인'의 고통으로만 인식하게 만든다. 오히려 저자는 묻는다. 이러한 사진을 싣고 퍼나르는 행위가 단지 고통받는 육체를 보려는 관음증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또 다른 문제는 사진에 담긴 제국주의적 시선이다. 대개 백인 피해자의 얼굴은 쉽게 공개되고 구경거리로 전시되는 일이 없는 반면, 피해자의 얼굴이 익명으로 선명하게 공개되고 두고두고 전시되는 것은 가난한 나라의 힘없는 사람들이다. 미군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하는 이라크 여성의 얼굴과 백인들 앞에 발가벗긴 채 공포에 떠는 이라크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인종을 구경거리로 만들던 오랜 관행의 연속인 셈이다.

저자는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고 연민만을 베푸는 태도를 넘어 고통을 안전하게 쳐다보는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 숙고할 것을 제안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체에 있는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인권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영화제의 정신을 살려 올해도 무료로 상영합니다.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10,000원 해설책자 증정 20,000원 기념티셔츠와 해설책자 증정
100,000원 판매하는 비디오 테잎 중 3편(10만원 상당)과 해설책자 증정

<새로 배급하는 작품>

올해의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을 비롯해 <나의 혈육> <저항하라!> <기업> <난민캠프>가 새로 배급됩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2일 (토)

제 25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3.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4. 제8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개막
5. <알림>2004 인권교육 워크샵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데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썩는다. 들은 척도하지 않는 회사를 협상 테이블이라도 불러내려고 파업을 했다. 수백 억대의 손해배상 가압류가 따라붙었다.

손배 가압류를 철회해 주겠다는 미끼에 동료들은 하나둘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버틴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제로 떠밀려 나왔다. 그렇게 잘려나간 사람이 85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챙겨보내지 못하면서 매일 회사로 찾아가 부당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 투쟁자만 골라 손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없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머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범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된 부당 정리해고의 책임은 덮어두고 '불법'파업이니 개인도 손해를 물어야 한단다. 마구잡이 '불법파업' 제조기인 현행 노동법이 악법이라 비난받아온 것이 어디 하루 이들의 일인가. 그럼에도 직장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 이들에게 손해까지 배상하란다.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차가운 감옥에 들어앉은 사람에게 안보 불안을 일으킨 죄로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잇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달면서까지 이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거하였건만, 국제노동기구에서 서조자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냈건만, 이 정부와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 가압류를 자제한다는 속빈 선언만 발표했을 뿐, 정부가 행한 공공부문 손배 가압류도 전혀 취하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을 절대 신성시했던 근대 민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며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그럼에도 이 땅의 노동기본권은 아직도 소유권의 발 아래 엎드려 있다. 17대 국회는 노동자와 노조에 손배 가압류라는 노예 쇠사슬을 채우는 노동법 손질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드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양심의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고 실현하는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또한 '분단의 특수성, 국가안보, 병역기피의 증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벌권이 한발 양보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나라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소위 국가안보 논리에 의해 희생당해왔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로 인정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해 언급한 판결에 주목한다"며 "다양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한지 2년이 넘도록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 처음으로>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폰(일명 MP3폰)의 출시에 따라 저작권자, 통신사업자,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정은 무료 MP3 파일을 MP3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음원제작자협회 등은 중심으로 한 저작권 단체들은 무료 MP3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내세워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P3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음악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한정된 시간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LG텔레콤의 합의 거부가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것이든, 사업 전략에 따른 것이든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무료 MP3 파일은 '불법'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료 MP3 파일이라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 파일로 만들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창작자가 허용한 경우도 있다. 혹은 돈을 주고 CD를 구입한 후, 이동하면서 음악을 듣기 위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무료 MP3 파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적법한 MP3파일마저 MP3폰에서 음질을 제한하거나, 재생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활용이 전체 비율에 있어서는 적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기술 및 행위)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냅스터 사례에서도, 비록 냅스터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냅스터를 통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는 음악 파일 역시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권리는 배제한 채 업체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만일 이대로 합의가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강요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개인들의 비영리적 이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문화의 확산과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개인들의 비영리적 이용까지 규제하려 하는 한, 그리고 정부가 문화를 '산업'적 시각으로만 인식하는 한,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기술에서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사 처음으로>

제8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개막

모형감독 체험마당, 계구착용 캠페인 등 부대행사 마련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채 피땀 흘려 결구를 메아리처럼 쏟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제8회 인권영화제를 선언합니다"

250여명의 관객이 몰샘틈없이 가득 찬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21일 제8회 인권영화제가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같은 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한다

만화가 이동수(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연재)씨와 노들야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조한나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 행사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활동가는 개막선언으로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인 '같은 자들의 인권'을 언급하며 질문을 던졌다. 유 씨는 "영화제를 통해 우리사회의 무능력한 사람들을 가두고 격리시키는 감독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감독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며 실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로 나선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전과자들이 출소해서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들을 받아들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애미 모델:FTAA 반대투쟁> 감독 샤샤 콘스탄자 초크 씨도 "이번 영화제 주제가 감독인 만큼 내 작품 역시도 전 세계를 감독으로 만든 자유무역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샤샤 씨는 3분여 동안 인권영화제를 축하하는 비트락스를 즉석에서 선보여 많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될 감독 관련 작품은 모두 7편으로 해외작 5편은 <스티비>, <아티카의 유명들> 등이고 국내작 2편은 사전제작지원작품인 <감독탈출>, <그림같은 집>이다.

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 김정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국내 작품 중 본격적으로 감독을 다룬 작품이 없어 다시금 제작환경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결국 국내작은 인권영화제의 사전제작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장애인접근권을 위해

제8회 인권영화제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의 관람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치들이다. 개막식 시작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도입방주 씨 등이 영화제에서 발언되는 모든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수화로 통역했고, 이동식 스크린을 통해 문자통역을 시도해 의사소통을 도왔다. 또한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에는 시각장애인용 수신기가 배포되었는데 이 작품은 '투니버스' 성우들에 의해 더빙되었다. 국내작 <엄마> 등 8개 작품에는 우리말 자막이 제공되고, 해설책자도 점자책으로 마련돼 있다.

조한나 씨는 "평소에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일이 없었다. 일반 영화관에서 장애인석은 늘 구석진 곳에 놓여지기 일쑤다"라며 이번 인권영화제의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가 장애인 관람접근권을 위해 좀더 이동이 수월한 곳에서 개최되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 상영

개막식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은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이 상영됐다. 영화 관람 후 이 작품에 대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나 씨는 "방관자가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현실을 잘 아는 감독이 영화를 사실적으로 잘 찍었다. 이스라엘 폭격에 의해 집이 부서지고 가족과 친척, 친구가 죽어 가는 현실 속에서 분노와 불안이 뒤엉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라팔지역을 봉쇄하고 폭격이 지속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작품의 상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미나 씨는 전했다.

모형감독 체험 부대행사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영상을 통해 '감독의 인권'을 만나는 것 이외에도 모형 감독 안

에서 '체험'을 해보는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대중 대체를 통해 접하는 감옥은 비약되거나 미화되기 일쑤이며, 감옥에서의 인권침해는 교도관들이 가하는 '폭력'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감옥의 시설과 환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반 인권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서울아트시네마에 설치된 감옥 모형은 실제감옥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0.92평으로 제작된 감옥모형에는 70센티미터의 화장실과 1미터 20센티미터의 거실로 구성되어 있다. 세면과 설거지, 용변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감옥 안에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담요, 수의, 세면도구 등도 준비되어 있다.

유해정 씨는 "현재의 평균적인 '감옥'의 모습을 최대한 가감 없이 재현하여, 관객과 함께 한국감옥의 현주소에 대해 소통하고 싶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관객들에게 모형세트 안에서 수감 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22~23일에는 인권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의 계구 착용 시현을 통해 비인간적인 계구 사용에 반대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인권투쟁 현장을 보여주는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현장]에서 관객들은 새로운 비디오 액티비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흥국생명 노조탄압을 다룬 특별프로그램 <유서>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22일 오후 1시, 25일 오후 4시에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의 인권영화상'은 인권영화제에 출품된 국내작 15편중에서 선정되며 영화제 마지막 날인 26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2004 인권교육 워크숍

'나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다른 이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교육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모든 이들을 초대합니다.

- ▶6월 5일(1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6월19일(3회) 환경과 인권
차이와 차별(I) 생활 속의 인권
- ▶6월12일(2회) 차이와 차별(II) ▶6월26일(4회) 평화와 인권
차이와 차별(III) 세계화와 인권

·장소: 노동사목회관 ·참가인원: 30명 이내 ·참가비: 1회당 5천원
·주최: 인권교육네트워크 <http://www.hredunet.net>
·문의 및 참가신청: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5일 (화)
제 25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선거편 '반전평화' 뺄것도 하지마?
2.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4.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선거편 '반전평화' 뺄것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5.29 평택 평화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평택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집회라며 단지를 걸고 나섰다. 평화축제를 준비해온 지역대책위를 비롯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평화축제 방해를 위한 관계기관의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택선관위는 지난 21일 '아시아민중과 함께 하는 5.29 평화축제(아래 평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반전평화에 대한 집회는 위 법조(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선거 시기라 하여 모든 집회 또는 문화적 행사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평택시선관위의 금지요청이 재보궐 선거에 대한 영향보다 오히려 5.29 행사를 금지시키기 위한 압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선관위 이재광 지도계장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와 반전평화 같은 주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하고, 이러한 평화축제 집회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선거기간에는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에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이호성 위원장은 "평화축제는 선거기간에 기획한 행사가 아니라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행사"라며 "수년동안 주장하고 활동했던 내용을 가지고 벌이는 준비된 행사인데,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금지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한 적도 없고 지지하기 위한 행사도 아닌데, 선관위가 확대해석 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같은 것은 위반할 생각도 없으니, 행사에 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녹음도 해가라"고 말했다. 평화축제 조직위원회 오두희 집행위원 역시 "선관위의 일권행위이며 표현에 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고 평화축제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추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비위의 결성선언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통일연대 결성추진 등이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민 씨의 사건을 두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이 다시금 드러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제동을 걸어야 할 법원이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민가협 송소연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상 국가기밀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남용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실질적 위해가 있었냐"며 반문했다.

김승교 변호사도 "(국가기밀에 대해)대법원은 '실질적 위협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결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주장해온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게 적용하면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최근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서 개정론자들의 주장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나 민 씨의 경우에서처럼 국가보안법은 결코 '신중한 적용'이 아닌 '자의적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송 씨는 "법원이 사법 적극주의를 반영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법원마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국가보안법 폐지 외는 다른 대안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사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 한겨레 홍세화 논설위원, 민변 이석태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밖에도 오태양 씨를 비롯한 병역거부자 4명이 함께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법으로는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라며 "병역거부는 기본적 인권에 포함되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대체복무제도의 정당성과 의미를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내용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는 그 동안 연대회의가 준비해 온 대체복무법을 설명하며 대체복부는 △병역의 일종으로 간주, 병역법에 추가하고 △독립적인 행정기관인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으로 판정하고 △특정 종교 외에 일반적인 윤리적 사유도 인정하는 한편, △대체복무지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근무,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및 제대 후에도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의 사무국장은 "지금 사람들이 군 질서의 와해나 군인들의 박탈감에 주목을 하고 언론도 문제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이것을 그냥 두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을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보고 국민으로서 최대한 존중을 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거부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승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지만 2000년 7월부터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복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태양 씨는 "우리들의 병역거부가 단순히 개인의 인권 차원을 넘어 평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병역거부의 뜻을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후 대만을 방문, 대체복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을 조사하고 17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올해 안으로 대체복무법 입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①] 내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

[편집자주] 5.29 평택 평화축제를 앞두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평화'를 전해온 사람들

의 '평화이야기'를 3차례에 걸쳐 실는다.

저는 예전부터 반전(反戰)이 아니라 비전(非戰)을 노래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에 반대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반전 예술이 아니라 아예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의 존재 자체부터 인정하지 않는 비전(또는 무전無戰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이 제가 견고 싶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폭력(反暴力)이 아니라 비폭력인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비전을 향한 일상적 문화운동이야말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미 군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던 저는 평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반전에 솔로 시작해서 결국 비폭력의 문화가 일상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폭력의 문화를 이루는 과정은 철저히 비폭력적이고 중앙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탈집중적이고 구성원들의 자치와 자율에 의해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네트워크적인 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런 식으로 전환될 때 비폭력의 문화도 점차 자라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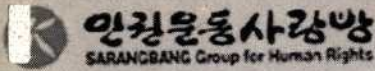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저는 기타를 치며 공연을 하고, 전쟁과 군대를 없애자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각종 집회에 참가해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한 명이 배풀고 나머지는 관람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저변이 점차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평화와 비폭력이 가진 소중한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철저히 탈권위적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상호부조의 원칙을 갖고 모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일상적 삶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 국가, 군산복합체 등이라는 사실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 보다 늘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평화운동이 좀더 활성화되고 강해져야 하겠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비폭력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일텐데, 이들은 전쟁과 군대의 위협에 맞서 투쟁해야 하는 모순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비폭력 운동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술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노래와 춤을 통해서 절로 흥이 나는 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비폭력 운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누구와 싸우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흥겨운 노래와 춤이야말로 평화 그 자체입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지 않나요?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6일 (수)

제 25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2.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3.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4.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5.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6.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소음관련 규제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이 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측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경찰은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와의 설명회(내부토론회)에서 개정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기준인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음측정 장소를 건물 외벽에서 내부로 변경하고 △집회소음도 1회 측정에서 2회 측정 후 평균치로 변경하며 △광장, 도로상 영업시설물과 경비 등을 위한 부속건물을 소음측정 장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시민단체와 설명회를 열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개정집시법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씨는 "경찰의 수정안은 자의성이 농후하다"고 일축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입법예고한 집시법 시행령(안) 중 '집회소음기준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 '소음측정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측정방식 역시도 경찰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민중연대 주재준 활동가는 "소음측정을 건물 내부에서 하더라도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2회 측정 후 평균 측정치를 내더라도 언제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24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찰이 제시한 소음규제에 대해 "소음으로 집회를 규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고, 일률적인 소음규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음규제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4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 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벨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벨로 적용·규제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행사 같은 대규모 집회는 대체적으로 80데시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소음 규제치에 부합할 수 있는 집회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집회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음은 자율규제에 맡겨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소음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기사 처음으로>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

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발표된 이번 사면·복권에는 파업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있는 양심수는 71명"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하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학생이나 사회활동가들 역시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간사는 더욱이 "지난해 한-칠레 FTA 반대 집회에서 구속된 농민, 불안해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던 주민,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노동자 등이 여전히 교도소에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가둬두면서, 국민화합과 상생을 언급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기사 처음으로>

● 김중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만의 촛불시위와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진 탄핵파는 달리, 파병 결정에 대하여 파병 무효와 평화 수호를 외치는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해 보이고, 심지어 총선에서도 파병 문제는 아무런 쟁점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파병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야기하는 공백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베트남전 파병의 파괴적 영향을 돌이켜볼 때 파병이 가져올 손실-평화정신의 소멸, 침략국이라는 국제적 낙인파 평화적 생존권의 파괴 등-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핵소추가 대통령직선제라는 하나의 헌법 '제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파병은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부정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파병 문제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관한 문제이다. 굳이 이라크의 재건을 내세운다면 점령군이 철수하고 이라크의 주권이 회복된 후에 민간지원단을 보낼 일이다. 백보를 양보하여 주권국 이라크의 파병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보다 명확한 유엔결의에 근거를 둔 평화유지군 형식으로 보낼 일이지 침략국이자 점령국인 미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한미동맹관계나 근거없는 국익론, 혹은 사안과 직접 관계도 없는 유엔결의를 빌미로 파병을 강행할 경우 침략전쟁에 동참한다는 국내외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점령군의 포로 학대 등으로 그나마의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역대 대통령들이 망명하고 살해되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아온 우리 국민들이, 향후 또 한 명의 대통령이 국제전법재판소에 서는 꼴을 보아야 되겠는가?

이 와중에 들른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통보로 세삼 안보 논쟁이 뜨겁다. 이것은 파병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미결맹론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이라크 파병결정을 단호히 철회하고 헌법이 명하는 국제평화주의를 굳건히 하여 평화애호국으로 거듭 남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아닌가 싶다. 침략전쟁에 대하여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하에서도 올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파병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펼 수 있고, 파병 결정을 철회하더라도 미국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차출 통보를 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술한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김중서 님은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②] 평화를 만들고 지키려면...

PEACE

이 세상에는 이어가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전쟁이다
평화는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전쟁이 이어온다
평화를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네 번이나 전쟁반대 하는 곳에 간 이유는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나는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보고 싶다
폭력이 끝나는 것을 보고 싶다
(2003. 4. 20)

이 시를 쓴 한길이(가명)는 '기차길 옆 작은 학교' 아이이고 중 1이다. 한길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못 배우고 약하다는 이유로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늘 착취와 무시를 당해야 했다. 때때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극심한 폭력에 놓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한길이는 폭력과 전쟁의 관계를 잘 이해한다. 작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동안 작은 학교 아이들끼리 날마다 쫓불기도를 할 때, 한길이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동화작가 박기범이 소망나무를 시작했을 때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작은 학교 식구들과 대학로를 찾았다. 작은 학교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평화 지킴이'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빈민지역의 아이들은 학교나 마을, 가정에서 겪는 폭력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폭력에 길들여진다. 그러다 보니 작은 학교 안에서도 힘센 아이가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평화 지킴이'다.

'평화 지킴이'는 작은 학교 안에서 만이라도 다른 동무들보다 더 약하고, 가난하고, 공부 못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노력해야 한다. 동무들끼리 다툼이 있으면 '평화 지킴이'가 나선다. 그런데 '평화 지킴이'는 절대 몸이나 말로 힘을 써서는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토론으로 다툼을 끝내야 한다. 아이들은 토론을 통해 평화를 지키는 시작은 나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 이라크 어린이나 북한 어린이를 돕는 일에 참여하면서 일상 속에서 지키는 작은 평화가 소중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에서 만난 평화바람의 초대를 받아 이번 축제에 참여하게 된 작은 학교 아이들은 평택에서 또 한가지를 배울 것이다. 평화는 작고 어린 생명이 모이고 모여서 다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차길 옆 작은학교 이모 김중미]

<기사 처음으로>

인권영화제 폐막식! 오늘입니다

하나. '올해의 인권영화상' 발표· 시상 및 상영이 있습니다.
둘. 사전제작지원작품 <감옥탈출> <그림 같은 집>이 상영됩니다.
셋. 올해 폐막식에서는 국내각 감독들과 심사위원, 인권운동사랑방 공동명의로 <이라크 파병반대와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간 : 5월 26일 저녁 7시 ·장소 : 서울아트시네마

<기사 처음으로>

▶◀ 근조 유현석 변호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 ◆영안실 : 서울대병원
- ◆장례미사 : 27일 오전 10시 혜화동 성당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5월 28일 (금)

제 258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월 1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2.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3. '전쟁반대, 파병철폐' 울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4.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노동부만 모르는 '불법파견'

도급위장 불법파견 뿌리뽑아야 ... 민주노총, 불법파견 1차 진정

금속제조업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27일 민주노총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사내하청지회 권수정 부지회장은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같은 작업 조에 편제돼, 동일한 작업을 하고 원청(현대자동차)이 정한 간접-특근에 입해야 함은 물론, 제반 규정까지도 준수해야 한다"며 불법파견의 사례를 소개했다. 금속제조업이 파견금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것.

지난 4월 노동부가 발표한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에서는 도급과 파견의 차이를 '사업수행의 독립성과 노동자의 채용, 작업지시, 근로조건 결정 등 노무관리 독립성 여부'에 두고 도급의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파견으로 보고 있다. 권 부지회장은 원청(현대자동차)의 필요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빈번하게 배치 전환되는 것을 물론 공정이동과 인사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은 "3~4월 동안의 자체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 파악된, 기아자동차 등 59개 원청회사와 923개 하청 업체에 대해서 집단진정을 노동부에 낼 것"이라며 "1차 고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19개 하청업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 해당종합개발"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대형 조선업체 9곳과 사내 하청업체 115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점검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115업체중 단 1곳에서만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불법파견의 적발건수가 현저히 적은 이유에 대해 "조선업종이 최종 공작물 완성을 위한 독립 공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져 있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작업 통제가 크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작업수행 과정에서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과정에서의 형식적인 관계만을 협소하게 적용함으로써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합법도급이라는 면죄부만 주었다"며 노동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민간과의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사이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불법파견에 대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듣지 않는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지은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펴낸곳: 여성과 인권 / 359쪽 / 2004년 5월

"그걸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아마 살질 못했을 거예요.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위로 받고, 그렇게 살아요 시방" 13살 어린 나이, 길원옥 할머니는 가막소 간 아버지의 벌금 을 벌어보겠다고 만주로 건너가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다. "술 팔고 노래하는 곳"이라는 건 알고 갔지만 위안소라는 곳이 "짐승보다 못한" 경험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서론도 되기 전에 자궁을 모두 들어내야 했던 길 할머니의 경험과 기억 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공식담론을 아래로부터 해체하지 않으면 결코 들리지 않는다.

이 책은 이렇게 기존의 '위안부' 개념의 해체를 용기있게 시도한다. '위안부'가 되기 전 에 순결한 처녀였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안소라는 곳 이 체계적인 성착취 장소였다는 것이 핵심이라면, '위안부'라는 개념도 일본군에 의해 성 착취를 당했던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나온 5권의 증언집이 모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라는 제목을 달고 있 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큰 전환인 셈이다.

책에는 길 할머니를 포함하여 12명의 '위안부'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우리 사회가 듣고 싶어하는 '위안부로서의 생활에 관한 증언'을 넘어, 할머니들이 삶의 주체 로서 자신의 생애를 기억하고 구술한 '그 너머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역사화 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특히 할머니들을 만났던 연구자들의 참여기는 할머니들 이 연구자들과의 만남에서 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회피하였는지 그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한다. 또 구술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 들이 보였던 심경과 태도의 변화, 구술이라는 행위가 할머니들에게 갖는 의미, 구술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들도 생생하게 전달받게 된다.

몇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서도 끝내 듣지 못한 이야기들, 얼굴을 숨긴 채 지난 세 월의 고통으로 주름진 손만을 드러낸 한 할머니의 사진, 여전히 침묵의 벽과 '죄지은 자'라는 낙인 뒤에서 인터뷰를 거절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도 가슴을 친다.

<기사 처음으로>

"전쟁반대, 파병철회" 올려 퍼진 인권영화제 폐막식

'올해의 인권영화상' 박종필 감독의 「노들바람」 수상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진실을 들추어내는 카메라가 있는 한 인권 영화제의 영사기도 계속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활동가의 폐막선언과 함께 26일 제8회 인권영화제가 막 을 내렸다.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15편의 국내작품 중 박종필('다큐인' 소속) 감독의 「노들바람」이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했다. 「노들바람」은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이동권투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노들야학의 '장애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과 '검시(검정고시)와 운동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박 감독은 폐막식에 참석해 "인권영화상은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과 또 그 들에게 밀착해 그들의 삶을 필름에 담은 카메라를 든 사람을 격려하는 상이라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더욱 현장과 밀접히 활동하면서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 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폐막식에 참석해 「노들바람」을 관람한 서혜림 씨는 "영화 를 통해 장애인이동권 투쟁이라는 힘든 싸움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게 되었다"며 "감독은 관찰자가 아닌 주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동참하고 있었다. 검시과든 운동과 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열정과 욕망을 솔직하 게 표현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접근권과 영화 관람권을 위해 장애인이동권 도우미, 영화 한 글 더빙, 국내작품들에 대한 한글자막, 점자 해설책자 등을 준비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현 활동가는 이런 인권영화제의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시도였다"며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극장 안에서의 이동이 불편한 점이나 흥 보부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 등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꼽았 다.

"인권영화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작은 카메라'가 되어 안타까운 인권 현실을 알려 나간다면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한 참가자의 말 은 인권영화제가 어떻게 인권운동과 접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 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폐막식에서는 인권영화제 출품 국내작 감독들과 '올해의 인권영화상' 심사위원,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중단을 요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 이라크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미군의 즉각적인 철군, 그리고 이라크의 민주주의는 이라크 민중들 에게 맡겨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처음으로>

[기획 기고 - 평화 릴레이 ③] 평화로 가는 길

내가 태어났고 일하며, 살아가는 대구에도 우리네 땅 어느 곳처럼 미군기지가 넓게 번져 있다. 어릴 때부터 미군과 미군기지의 모습을 자주 보아왔고 그때마다 항상 겪는 것은 구역질과 모욕감이다.

얼마 전, 파병철회를 위한 서명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받을 때의 일이다. 폭격과 학살, 온갖 참상이 담긴 사진들이 펼쳐진 역전 앞에 부대를 나선 듯한 미군들이 제 집 안방처럼 별칭 드러누웠다. 거기에 낯술을 한잔 걸친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대한민국은 미국이 주는 밀가루 죽 얻어먹고 오늘날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원조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것들로 키워진 역사.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서 당당하고, 우리네 삶은 비틀거리고 화끈거린다. 우리가 미군기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도, 가장 슬픈 일은 미군들이 우리를 무슨 구경거리 보는 듯한 눈길로 맞이할 때이다. 이런 상황은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우세한 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빌어먹는 엄청난 대외의존과 약탈경제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파병에 동의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그것에 끔찍없이 잡혀있기 때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존에 지탱해온 삶과 역사를 청산하는데 즉, 자주와 자립으로 가는 올바른 신호는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사회)는 자발적으로 고르게 가난한 삶을 선택을 해야하며, 이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식량, 식수, 에너지 등이 자급되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농민과 농사를 지을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자발적 가난의 원칙은 평택평화축제는 물론 여러 운동과 연대할 때 나를 포함한 우리 동지에게 핵심적 호소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택에선 이미 많은 농경지와 경작지가 미군기지 때문에 사라졌고, 추가로 몇백만 평이나 되는 땅이 치유불능으로 죽어갈 것이다.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한, 한반도 어디든 평화는 발붙일 수 없다.

평택 평화축제가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돈(수입이든, 지출이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쓰레기를 많이 남기지 않으려 하고, 참가자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모이고 보여주려고 한 점.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 홍보할 때도 준비물은 스스로, 알맞게, 솔직하게 준비했고, 현안투쟁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알려왔다. 우리는 축제의 성공 역시 투쟁의 성과이며, 축제가 평화적 투쟁이길 바란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